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복지 데스크

9만가구에 아이돌보미 서비스...사회 일자리 9만6천개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1만7천개...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 맞춤형으로 통합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자 확대...장애 유형·특성 맞는 일자리 1만개 맞춤형 제공도

내년에는 사회서비스일자리가 올해보다 9만6000개 가장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의 대응방안으로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직접 서비스 방식으로 변경, 취약 노인 45만명에게 욕구중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현재 8만1000명인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9만명으로 확대하고 시간도 월 평균 104.5시간에서 125.2시간까지 늘린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규모도 6000명에서

1만100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맞벌이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총 9만 가구에 종일제 또는 시간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온종일돌봄 일자리 1618개, 아이돌보미서비스 일자리 4000개 등이 확대된다.

정부는 입원 시 간호와 간병을 함께 지원해 가족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8400병상)할 계획이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자리는 5800개가 늘어난다. 자해, 타해 등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24시간 대응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34팀, 204명)도 신설한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서비스도 늘린다. 노인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인일자리도 1만7000개가 추가 제공되며,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 1만개 가량이 맞춤형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OECD 평균은 20.1%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1.1%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도 유럽 주요국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급격한 저출산과 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령화로 인해 사회서비스 수요는 빠르게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노인 일자리 질에 대해서도 “9만6000개 중 1만7000개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포함돼 있는데 이 분들에게 대해서는 월 60시간 이상, 또 65만원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게 돼 있다”며 “양질의 서비스로 제공하겠

다”고 설명했다. 올해 201개소인 국민체육센터는 내년에는 271개소까지 늘리고 89개소인 스포츠클럽도 내년에는 171개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도서관 야간개방 일자리도 1421개에서 1554개로 늘어나며 작은 도서관 순회서비스도 53개에서 300개로 확대된다.

서울=김윤호 기자

/기자수첩/

장애인 문화체험 의혹 없애야

장성군이 내달부터 장애인 문화 체험을 실시한다. 4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다. 목적은 장애인 삶의 질을 제고하고 타지역의 우수한 문화 체험함으로써 감성을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매년 많은 장애인들이 행사에 참여하곤 한다. 문제는 군이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군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일견 대단히 공평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으니 문제다. 자칫 공정을 빙자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이 공고를 한다해도 해당되는 업체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

문이다. 여타의 업체들은 그냥 들러리나 서는 격이 된다. 따라서 이같은 오해를 불식하고 관련 업계의 고른 혜택을 위해서는 순차적 배분방식으로의 전환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이다. 형평성을 고려해 관내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이 지역사정을 감안할 때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이 업체의 주장이다.

오죽하면 장성군의 방침이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그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편법에 다를 바 없다는 말까지 나돌까 싶다.

특히 이같은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은 선정이 유력시 되고 있는 업체 사장과 군청 관련업무 공무원들간의 유착 정도가 보통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같은 폐해를 우려하고 지역 현실을 감안해 전남 도내 여수시와 영광·함평·화순·담양군 등은 입찰을 통한 방식이 아닌 물량을 순차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물론 입찰을 통한 공개경쟁이 공정성 담보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장성군의 설명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이 영세한 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특정업체의 이외의 관계자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장성군은 왜 전남도내 많은 시군들이 공개경쟁 방식이 아닌 순차적 배분방식을 택하고 있는지 도 헤아려야 할 것이다.

장성=박종영 기자

사람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힘 모으다

보성군 보성읍, 지역공동 치안협의체 협약

보성읍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8일 범죄로부터 취약한 소외된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보성읍행정복지센터, 보성읍내파출소, 소방119안전센터, 이동장협의회 4개 기관·단체 지역공동 치안협의체 협약을 맺었다.

지역공동 치안협의체는 기관별 업무 담당자 1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기관별 현안 업무를 공유해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 사회취약계층 중 중점관리 대상자에 대한 위험 및 갈등 요소를 해소하고, 지역 문제 해결방안 강구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보성읍 파출소 김호진 경사는 “최근에는 집단 간 갈등·대립이 범죄 등 일탈행위로 연결되는 양상



을 띠며, 개별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려워 기관 간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경률 보성읍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각 기관 간 책임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철저히 해 살기 좋은 보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인규일 기자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